



선진형 국가표준화 기반 조성

기술표준정책과 기계사무관 권덕중
02)509-7221 nocturn@ats.go.kr

표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부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등이 표준과 관련된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자국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UN, WIO, APIC 등의 국제기구들은 국가간 원활한 국제무역을 위해 ISO, IEC, ITU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와 협력하여 표준을 활용한 다자간 무역규범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들도 표준의 범위를 제품과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과 같은 서비스, SR(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경영관행,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보안 등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표준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선진형 국가표준화 추진체제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표준 선진국에 비해선 부족한 민간의 표준화 활동, 신기술·특허기술 등의 표준화 전략 등도 마련하고 시로 상이한 남북 표준의 통일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화 추진 5개년 로드맵 수립

* 04년 말 기준으로 국가표준(KS)은 19,865종으로 ISO/IEC의 국제표준(20,237종)과 비교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율 96.6% 달성으로 표준의 질적 세고 노력도 당초 목표를 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가표준(KS) 확충 방식인 1년 단위의 단기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표준 개발 모형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차세대 성장동력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국가표준화 연차별 정비계획이 없이 당해 연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가표준화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의 각종 기술개발 중 장기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기술·표준 수요예측과 기술발전 전망에 따라 각 산업별, 분야별로 전략적 표준화 추진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동시에 KS 활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가표준(KS)의 전반적인 세검도를 통째서 국내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표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표준개발기구(SDO) 제도 도입 검토

국가표준화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년간 국가표준화 체제의 골간은 정부에서 표준안을 작성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KS)을 제정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표준은 산업의 효율성을 민간의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활용하기 위해 운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국가표준 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개발을 위해서 표준 초안의 개발은 산업현장과 밀착된 민간 개발기구에서 담당하고 정부는 민간의 표준 개발의 지원과 개발된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상향 채택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리를 통한 국가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3만 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표준개발기구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표준의 수요 발굴부터 개발까지 국가에서 담당하는 체제에서 표준의 시장적합성, 적시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 민간에서 직접 국가표준 초안을 개발하는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민간표준개발기구(SDO)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의 산업 및 표준화 체제에 적합한 최적의 SDO 체도를 도출하고, 표준개발기구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허기술의 표준화 추진

지금까지 국가표준(KS)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기술, 범용기술 위주로 제정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국가표준

(KS) 19,865종에 채택된 특허기술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기술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은 KS 0001 규격서의 서식에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앞으로 민간의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고 표준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허기술의 표준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허기술이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기 위한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과 특허간의 상이한 속성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또한 특허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선진화된 표준화 추진체계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기술의 국가표준(KS) 채택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도 추진할 것이다.

남·북표준 통일화 사업 추진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경우 전체 통일 비용 중 약 10%가 표준과 관련된 문제에 소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2000년도에 발표된 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국가규격(KPS)은 약 14,000여종으로 KS에 비해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과 부합화되어 있는 남한 표준에 비해 질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규격은 강제규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검사·인정제도 등 적합성평가 시스템은 이제 도입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등 표준의



국제화가 더딘 상황이다.

남·북한의 표준의 상이함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의사전달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전력, 도로와 같은 SOC 분야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의 남·북 표준화 통일 노력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문자코드 및 한글로마자 표기법 표준 논의”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통일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 표준화 당국자들 사이의 공식채널은 정비되어 선만적인 표준 통일화는 무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체계적인 남·북 표준 통일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남·북 표준화 협력사업을 민간 중심에서 국가협력사업으로 격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업표준 통합을 위한 통

일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이외에도 국가 R&D 추진체제에 개발기술의 표준화를 반영토록 하여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표준 반영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수립하는 각종 중·장기 계획 등에 표준화 정책을 반영하여 표준화가 법정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이상과 같은 국가표준화 체제의 신진화 계획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과 표준화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 추진할 「산업표준화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먼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표준화 추진 5개년 로드맵과 특허기술의 국가표준화 지침 등을 올해 각 사업을 검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